

2011년 노동시장 전망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진행한 급격한 고용조정은 2009년 상반기를 넘어 서면서 일단락되었고 2010년에는 32만 명을 상회하는 본격적인 고용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 취업자는 감소하고 민간부문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점,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이 증가한 점, 제조업 고용이 추세적 감소 경향을 벗어나 19.1만 명이나 증가한 점, 여성고용 증가가 두드러진 점 등은 특히 고무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사실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었다.

2009년 말 2010년 초에 국내외 유수한 전망기관들은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가 2010년에는 완만 한 성장을 하다가 2011년에 본격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10년에 국내 및 세계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이에 힘입어 한국경제도 실물경제와 노동시장 모두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다. 2010년의 빠른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성과는 다행스러운 일 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2011년의 경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의 경기순환기 저점은 2009년 2월이다. 1993년 1월 이후부터 2009년 2월까지 있었던 네 번의 경기순환기 중 확장기간은 평균 28.0개월, 수축기간은 평균 20.3개월이었다. 금번 경기순 환기의 확장기가 28개월이라면 경기 고점기는 2011년 6월이 된다. 경기순환기마다 확장기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2011년 경기나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하는 근거 중의 하나이다. 2010년 12월 경기동행지수가 4개월 동안 하락한 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행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 특히 건설투자가 2.9%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도 1.2% 감소한 점 등은 투자가 경기 전망에 가장 민감한 사실을 감안할 때 2010년에 비해 2011년의 경기 전망이 밝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12월의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각각 9.8%, 2.1% 증가한 것은 4.3% 증가한 소매 판매와 22.6% 증가한 수출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2011년의 해외시장 사정과 소매 판매 전망도 2010년보다 밝지는 않다. 각국 정부가 재정 및 금융통화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 덕택에 세계경제는 2009년 6~8월을 저점으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견실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확장정책이 증가시킨 재정 부담은 재정위기 우려를 낳았고 그러한 재정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유럽의 각국 정부들은 긴축 모드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등록금 인상이나 공무원 임금동결 등을 계기로 유럽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갈등은 악화된 재정 상황과 긴축정책의 여파 때문이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국의 긴축정책 기조는 한국경제의 수출 증가도 제약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시장 적응도가 높아져 중국의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물가 상승은 내국인 소비증가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도 줄이게 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원화에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매 판매 증가율 둔화로 이어질 요소들이다.

이와 같은 성장 둔화 전망은 2011년도의 고용 증가가 3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5.0% 수준의 성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약 28만 명 정도의 고용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 이래의 고용탄력성 감소 현상이 이번 경기순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20대 6.9만 명, 30대 0.4만 명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청년층은 고용률 자체가 감소함으로써 인구 감소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2008년과 2009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된 청년층 고용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에도 작년 수준 이상의 민간부문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졸업 후의 일자리 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층에게 인적자본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당분간 고용정책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I**